

## 이달의 이슈 | 01

#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정책방안



김 영 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ydkim@kif.re.kr

## 1. 국내 가계부채의 위험성과 평가

국내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주요한 위험 요인으로 최근 대두되고 있다. 국내 가계부채는 2000년대 접어들어 상당히 빠르게 증가했으며 학계나 언론을 통해 그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하였다. 최근 들어서는 정책 당국도 가계부채 문제를 한국 경제가 풀어야 할 최대 현안으로 인정하기 시작하였다. 가계부채의 절대적 규모는 작년엔 1,000조 원을 넘어선 이후에도 그 증가세를 멈추지 않고 있고, 2015년 1분기 말 현재 국내 가계부채는 약 1,100조 원에 달하고 있다. 최근 주택담보대출의 급증세를 감안하면 2015년 상반기 가계부채는 1,100조 원을 훌쩍 넘는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가계부채의 위험성은 개별 가구(또는 차주)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금융 및 경제 시스템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적정수준을 넘어선 과도한 가계부채는 개별 가계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축적될 경우 금융기관의 부실을 유발하여 금융시스템 전반의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다. 또한 과도한 가계부채와 원리금 상환부담은 가계가 소비지출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처분소득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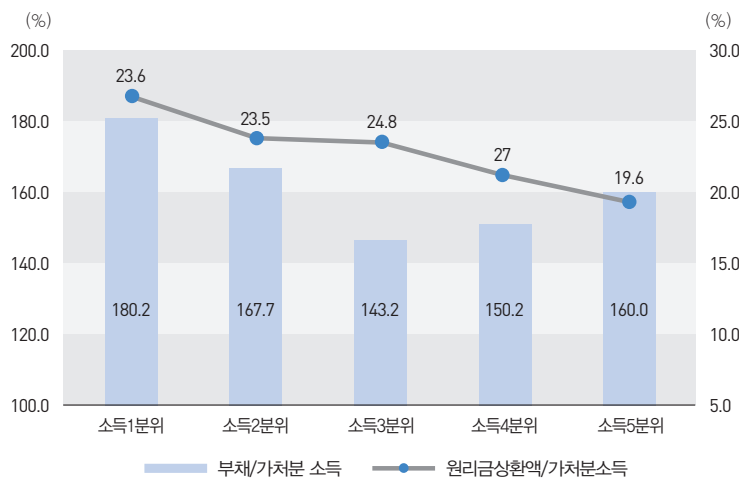
### 저자 학력, 경력 및 최근 연구

-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경제학 박사
- 국내 중소기업 정책금융 제도와 효과 분석(2015), 국내 기업부문의 레버리지 추이와 부실위험 축소방안: 외감기업에 대한 미시적 분석(2014), 국내 금융투자산업의 발전방향 및 과제(2014) 등

줄임으로써 거시적으로는 내수 성장을 저해한다.

사실 가계부채 문제는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을 단편적으로 언급하기 어렵다. 하지만 국내 가계부채는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 증가 속도가 줄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저소득층, 고령층, 자영업자 등의 취약계층은 물론 과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었던 소득 계층들의 상환 부담도 점차 커지고 있다.

비록 금융당국이 공식적으로는 가계부채로 인한 금융위기 발생의 가능성을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질적인 측면에서 취약계층의 부채상환능력을 평가해보면 현재 상황이 그리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관련 대표적 미시자료인 가계금융복지조사(2014년)의 결과에 따르면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의 비율은 전체 평균이 156.4%이며, 원리금상환액의 가처분소득 대비 비율은 21.5%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소득분위별로 살펴볼 경우 저소득층인 1분위의 부채 비율이 180.2%로 가장 높았으며, 원리금상환액의 비율 역시 1분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인 5분위의 비중은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2014)

[그림 1] 소득분위별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전체)

특히,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동일한 분석을 할 경우 소득분위별 부채에 대한 부담 격차는 더욱 크게 나타난다. 부채 보유 가구 중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인 소득 1분위와 2분위의 가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은 각각 523.8%, 273.6%이며, 가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 역시 각각 68.7%, 36.9%로 나타나고 있다. 즉 저소득층 가구는 전체 가치분소득의 40% 이상을 부채의 원리금 상환에 지불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소비활동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별로 없는 상황이다. 반면, 고소득층인 소득 5분위의 부채비율과 원리금상환액 비율은 각각 195.7%와 23.1%로 나타났다. 요컨대, 소득분위별 부채에 대한 부담의 차이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가계부채의 심각성이 저소득층에서 더욱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 2. 서울지역의 가계부채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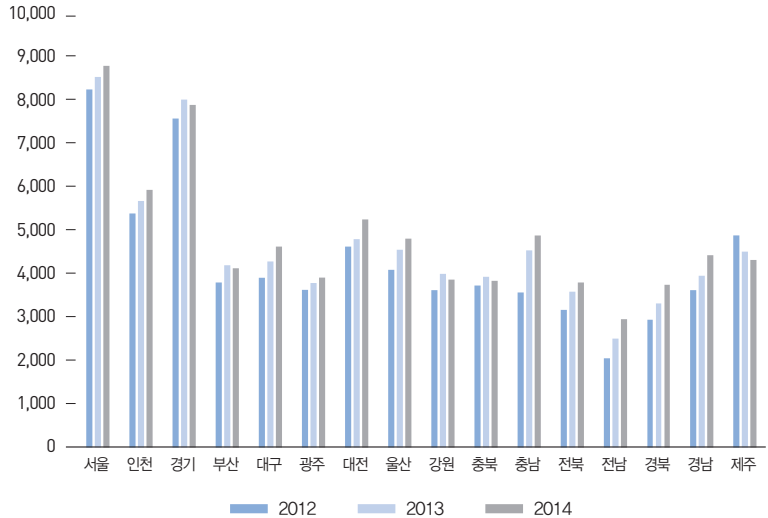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는 전체적으로 저소득층, 고령층, 자영업자 등 소위 취약계층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이 더욱 큰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지역별로 가계부채 현황을 평가하면 조금 다른 각도로 문제를 살펴볼 수 있다.

가계금융복지조사(2014)에 따르면 전국 평균 가계부채 규모는 5,994만 원이지만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평균 가계부채 규모를 시·도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서울이 8,785만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큰 평균 가계부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남이 2,942만 원으로 가장 적은 평균 가계부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평균은 8,015만 원이며, 비수도권은 4,152만 원으로 가계부채 수준이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 내에서도 인천은 5,889만 원으로 서울, 경기지역과 비교해 다소 큰 차이가 있다.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평균 가계부채 규모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이유는 전반적으로 주택 가격 등 주거비용이 여타 지역에 비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가계자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살펴보면 전국 평균은 18.0%, 수도권이 19.8%, 비수도권이 15.5%이다. 특히 전국 시·도에서 가장 높은 가계부채 규모를 가진 서울의 가계자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인천, 경기도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수도권 지역의 높은 주거용 부동산 가격이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이 결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 가계의 가계부채 부담은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전국 평균 가계 경상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28.2%인데 반해, 수도권이 161.3%, 비수도권이 94.2%로 지역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서울이 174.6%로 가장 높으며, 전남은 71.2%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일부에서는 가계부채가 소위 주택담보대출로 대표되는 담보대출의 형태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서 가계부채와 관련된 가계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수준이라는 것도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2014)

[그림 2] 지역별 가계부채 규모

### 3.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당국은 공식적으로 가계부채 문제로 인한 금융위기 발생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공식적인 평가와는 달리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정부의 인식 및 대응 수준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실제로 수년 전부터 가계부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사회의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금융당국 역시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여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대응방안을 활발히 마련하고 있다.

가계부채 문제가 금융시스템에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논의가 제기되면서 2011년 6월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 대책’을 통해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대책이 본격적으로 마련되었다. 이 대책에서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대응방향 및 정책적인 수단을 마련하였다. 여기에는 가계대출의 적정한 증가를 유도한다는 기본 방침 아래 금리충격과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변동금리·만기일시 상환대출 위주의 국내

가계대출 구조를 고정금리·분할상환형태의 대출로 전환을 유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금융당국의 대책은 여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다. 이듬해인 2012년 2월에는 '제2금융권 가계대출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상호금융을 중심으로 한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가계부채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어나자 추가적인 대책이 마련되었다.

2014년 2월 발표된 '가계부채 구조개선 추진방안'에서는 가계부채 과다문제에 대한 위험을 심각하게 인식하여 소비를 억누르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고자 하였다. 특히 기존에 추진하였던 고정금리·분할상환 중심으로의 가계부채 구조 전환을 좀 더 빠르게 유도하여 가계부채의 점진적인 상황을 통해 전체적인 가계부채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금융당국의 인식 전환 및 정책 추진과 달리 아직까지 가계부채 문제의 완화는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가계부채 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들이 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러 정책과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듯하다. 최근 국내 경제의 활력이 사라지면서 이에 대응하고자 여러 가지 경기 활성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들이 가계부채 관련 정책들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지난 2014년 8월에 발표된 LTV(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합리화 조치이다. 정부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계대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과 관련된 규제인 LTV·DTI 규제를 다소 완화하였다. 하지만 LTV·DTI 규제 합리화 조치 이후 가계부채가 다시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부가 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여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이미 누적된 국내의 가계부채가 상당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최근 경기침체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조치로 통화당국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인 1.50%까지 낮추면서 가계부채는 다시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4. 향후 정책방향

사실 여러 경제적인 상황을 감안하면 가계부채 급증에 따른 정부의 대응에 현실적으로 상당한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가계부채의 총량을 인위적으로 억제하는 정책을 펼칠 경우 가계의 자금유동성을 악화시켜 단기적으로 부실한 가계대출이 늘어나고, 나아가 전체 경제 회복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가계부채 문제의 해결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가계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한다거나 점진적으로 가계부채의 상환구조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가계부채 문제는 절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정책당국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급격한 가계부채의 감축은 경제시스템 운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중앙정부 차원의 거시적인 정책 대응과는 별도로 서울시 등 지방정부도 가계부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가계부채 부담은 상당 부분 높은 주거용 부동산 가격과 연관되어있다. 또한 수도권의 인구분포나 인구 밀집 정도를 감안하면 저소득층, 고령층 등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문제는 보이는 것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서울시는 저소득층 부채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이들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다양한 저소득층 소득 증대 정책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나 서울시 등에서 운영 중인 서민금융제도에 대한 취약 계층의 접근성을 확대시킬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일부 시·도에서 시행 중인 저소득층의 저축 장려를 위한 매칭 방식의 저축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가치가 있다.

가계부채 문제는 결코 금융부문만의 문제가 될 수 없으며, 개별 가계의 다양한 입장이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하나의 정책으로 관련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부채탕감과 같은 가계부채 문제 해결 전략은 개인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고 나아가 더 심각한 수준의 경제적 충격을 불러올 우려가 있다. 생각건대 가계부채 문제의 해결은 궁극적으로 가계의 부채 상환능력을 키우는 국민들의 소득 증대 문제와 직결될 수밖에 없다. 금융부문의 대책뿐만 아니라 경제 활성화, 국민 소득 증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 패키지가 성공적으로 결합하여야만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의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 참고자료

1. 금융연구원, 2013, 「가계부채 백서」
2. 통계청, 2014, 「가계금융복지조사」